“‘김건희 국민 특검’ 반드시 관철하겠다”

민주 박홍근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성역 없는 수사로 사법정의 세워야”
“尹정부 9개월…눈 떠보니 후진국”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 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라며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돼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다”며 “대체 누가 대통령이냐. 불소추 특권이 김 여사에게도 적용되느냐. 김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 불가침인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남은 길은 특검 뿐이다. 윤석열 검찰은 더는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등 야당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도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다”며 “‘답정너’ 결론을 향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권력 남용의 끝판왕’”이라고 비난했다. 또 “검찰에 의한 정치적·자의적 수사가 판을 치고 대통령 자신과 가족만 예외가 된다”며 “‘야당 유죄, 윤심 무죄’인 윤석열 검찰에서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은 완전히 망가졌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9개월에 대해 “민생·경제 분야, 외교 분야, 안보 분야, 안전 분야, 인사 문제까지 ‘5대 참사’가 진행 중”이라며, “국민은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고,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는 사라졌으며, 살기 위해 매일 포기를 거듭해야 하는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며 “위기의 대한민국의 문제는 윤 대통령”이라고 직격했다. 또 “대통령의 반지성주의가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해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 등을 거론하면서 “외교의 꽃이라는 정상외교가 ’대통령 리스크‘로 덮이다 보니 국민 전체가 트라우마에 빠질 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도 거론하며 “여당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여기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여전히 ‘검사들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며 “불통과 독선을 버리고 소통과 화합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대장동 특검’ 촉구…“‘50억 클럽’ 일당 모두 수사 대상”

“특검 후보 비교섭단체 추천해야”
김건희 여사 검찰 소환 조사 요구

정의당은 13일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비리 의혹의 진상을 밝힐 특별검사법 도입을 촉구했고,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8일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고리로 특검 필요성을 부각하며 ‘50억 클럽’ 일당 모두가 수사 대상에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곽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 사건은 검찰의 의도적인 무능이 부른 사법 정의 훼손 사건”이라며 “곽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윤창근·강한구 전 성남시의원 등 일당 모두가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특검 후보는 거대 양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 3당 합의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50억 클럽의 실체는 법조계 고위 인사는 물론 민주당과 국민의힘 출신 전(前) 의원이 연루된 개발비리 카르텔”이라며 “양당의 특검 추천은 검찰의 의도적인 무능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교섭단체 3당의 합의를 통한 특검 후보자 2명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의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의당의 계획이다.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도 촉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재판으로 김 여사 소환조사를 피할 수 없는 근거가 명확히 드러났다”면서 “수사없이 죄 없다고 감싸면 영부인의 품격이 지켜지느냐. 검찰의 즉각적인 소환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에 ‘당장은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여전히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이다.

정의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가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김건희 특검보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꼼수’로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李 구속영장 청구 관측 ‘단일대오’ 주력

檢수사 부당성 알리며 결집 유도
체포동의안 대응 표 단속도 온 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커지자 내부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169석으로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만큼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충분히 부결시킬 수 있지만,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미리 대비에 나선 것이다.

당 지도부는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를 정치 편향적이라고 규정하고 ‘야당 탄압’ 등의 논리를 앞세워 체포동의안 당론 부결에 힘을 싣고 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의원들의 총의가 그런 것(체포동의안 부결)이라고 하면 당론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고? 내용이 없는데? 증거가 없는데?”라며 “(영장 발부는) 검찰의 미친 짓! 범죄행위입니다”라고 적었다.

당 지도부뿐 아니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에 미치는 부담을 지적해 온 비명(비이재명)계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에도 이 대표 측은 막판까지 방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의 당위성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고 직접 말할 수는 없어도 검찰의 행태가 매우 무도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며 “이를 통해 부결의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도부는 특히 비명계 강성 의원들이 여전히 체포동의안 부결을 ‘이재명 방탄’이라며 비판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는 것도 그렇지만, 부결해도 (당에 부담이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게 딜레마”라며 “당론으로 부결하자는 것도 그만큼 지도부가 불안해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헌재 ‘이상민 탄핵’ 심판 주심에 이종석 재판관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보수 성향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재판관을 지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9일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이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이 재판관은 대구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거친 정통 법관이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며,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다.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힌 이 재판관은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 재판관은 재판관들의 사건 논의인 평의 절차 등을 이끌게 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재판관 9명 모두가 각자 법리 검토와 판단을 내리는 탄핵 심판의 특성상 주심의 역할이 지대하지는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변론의 공개 여부나 변론 장소 결정, 증거조사 수명 재판관 지명 등의 권한도 주심 재판관이 아니라 재판장인 헌재소장이 갖고 있다.

헌재는 사건의 쟁점과 법리 검토를 맡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 중이다.

피청구인인 이 장관은 법무법인 율촌에 법률대리인 역할을 맡기고 탄핵 심판 준비에 들어갔다. /연합뉴스